

미취업 청년 사상최대인데 '4차산업혁명'은 구인난

인력경쟁력 韓 꼴찌...올해 인력부족률 29.4%→5년 뒤에도 28.3%

5년 뒤에도 인력경쟁력 꼴찌 전망...AI 등 비교우위 기술분야 '전무'

졸업(종퇴) 후 미취업한 청년은 올해 5월 기준 166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인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의 4차산업혁명 분야별 협회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국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0년 현재 한국 4차산업혁명의 인력부족률은 29.4%로 인력수요의 약 3분의 1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뒤인 2025년에는 28.3%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총 5개 주요국의 4차산업혁

명 인력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한국을 100이라 가정 시 ▲미국 123.3 ▲독일 114.4 ▲일본 107.8 ▲중국 106.7 순으로 나타나 한국이 가장 뒤처졌다.

2025년에도 ▲미국 121.1 ▲중국 114.4 ▲독일 106.7 ▲일본 104.4 순으로 여전히 한국이 최하위일 것으로 예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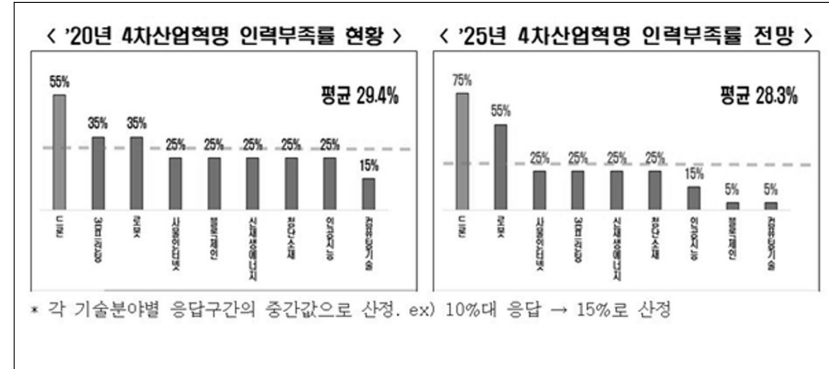
기술분야 별로는 2020년 현재 한국은 유일하게 중국에 대해서만 로봇,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분야에서 앞서 있는데, 이마저도 5년 후에는 따라잡혀 9개 기술 전 분야에서 비교국가들 중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국내 산업 생태계

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을 감안할 때 4차산업혁명의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4차산업혁명 경쟁력의 핵심요소는 인적 자본인 만큼 교육인프라 확충 등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국가별 4차산업혁명의 9개 기반기술에 대한 인력경쟁력 1위 분야는(공동 1위 포함) 미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8개, 독일은 4개(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컴퓨팅기술), 중국은 3개(블록체인, 인공지능, 컴퓨팅기술), 일본은 2개(블록체인, 첨단소재)로 나타났다.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앞선 분야가 단 하나도 없었고, 9개 기술분야 중 인공지능(AI) 등



6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로봇,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3개 분야에서는 중국을 앞섰다.

5년 후 주요 국가별 4차산업혁명의 9개 기반기술에 대한 인력경쟁력 1위 분야는(공동 1위 포함) 미국은 컴퓨팅기술을 제외한 8개, 중국은 3개(드론, 인공지능, 컴퓨팅기술), 독일은 2개(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일본은 2개(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 중국에 앞서 있던 로봇,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3개 분야에서도 중국에 따라잡혀

2025년 모든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에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꼴찌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 협회들은 국내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전공 개설 확대, 능력 있는 교수진 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29.6%) ▲기술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 인력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22.2%) ▲산학협력 활성화(14.8%) ▲성과보상제, 유연근무제 등 인력 유치를 위한 유연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14.8%) ▲기술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14.8%)

▲해의 인력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3.7%)을 꼽았다.

올해 한국의 4차산업혁명 인력부족률은 29.4%로 조사됐다.

인력이 부족한 주요 기술분야는 ▲드론(55%) ▲3D프린팅(35%) ▲로봇(35%) 등으로 인력부족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후에도 인력부족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4차산업혁명 인력부족률은 28.3%로 현재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며 ▲드론(75%, 20%p ↑) ▲로봇(55%, 20%p ↑) 등 분야에서 인력부족률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계자들이 지적한 산업계의 인력 확보 애로사항은 ▲실무에 적합한 기술인력 부족(40.7%) ▲석박사 등 전문 인력 부족(33.3%) ▲예산지원, 규제완화 등 정부 지원 부족(11.1%) ▲근로시간, 호봉제 등 경직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7.4%) ▲경쟁국 수준 임금 지급 어려움(7.4%) 등이었다.

김민정 기자

하루에 6.5대꼴 사라진 ATM...“운영 개선 방안 마련해야”

꾸준히 감소하는 ATM “국민 현금이용 어려움 예상”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은행권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감소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등을 막기 위해 운영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ATM 설치 대수는 지난해 기준 5만5807대(잠정)로 2013년말 7만105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6년 연속 감소했다. 6년간 줄어든 ATM은 1만4298대로 연평균 2383대, 일평균 6.5대꼴로 사라졌다.

단위면적(1km)당 ATM이 가장 많은 서울(약 36대)과 가장 적은 강원·경북·전남(0.3~0.4대) 지역

격차 격차는 약 100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ATM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인터넷뱅킹과 간편결제 등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이 쉽지 않고,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은과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국내 ATM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 은행권 ATM 설치 정보를 수집관

고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중에는 수집된 ATM 정보를 바탕으로 ATM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쉽게 ATM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ATM 정보제공’ 앱을 개발한다. ATM 배치 현황 파악이 가능한 별도 웹페이지(시스템)도 구축한다.

현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 인프라도 늘릴 계획이다. 매장에서 물품 대금에 인출 희망금액을 추가해 대금을 결제한 뒤 결제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맹점 현금출금’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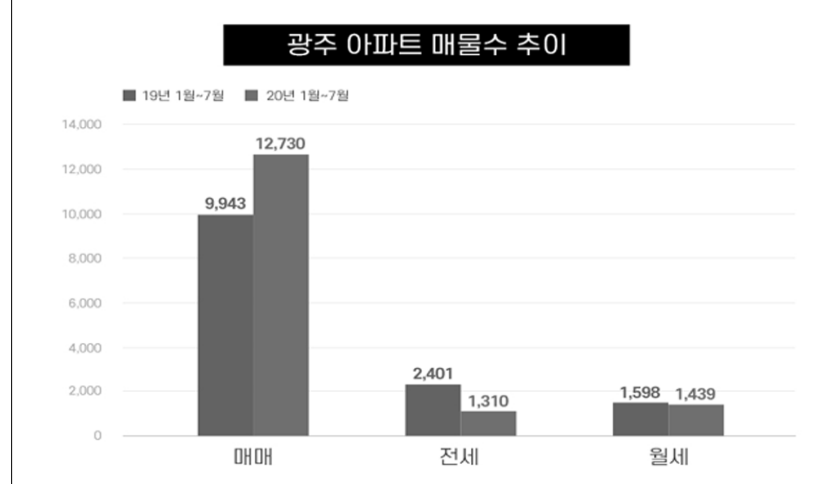
현금으로 결제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8월말 미니스톱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이마트24 등 3개 유통사업체가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현금카드 가맹점에서의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등이 시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유통기관과 유통사업자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전세난’ 우려

사랑방부동산, 아파트 매물수 추이 조사



광주 아파트 매매 매물은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세 매물 건수는 지난해 대비 반토막으로 줄었다.

11일 광주 지역 부동산 전문포털 사랑방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사랑방 부동산에 게재된 아파트 광고량은 일평균 매매 1만2730건·전세 1310건·월세 143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일평균 매매(9943건) 광고건수는 28% 상승한 수치지만, 전세(2401건)는 45.4%, 월세(1598건)는 10.0% 줄어든 수치다.

임대시장의 축소 속 전세 감소

는 두드러졌다. 올해 전세 광고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다. 매매 광고량 대비 전세 비율 역시 지난해 24%에서 올해는 10%대로 곤두박질 쳤다.

이 같은 시장변화는 광주 부동산 경기 추세를 엿볼 수 있는 남구 봉선동 매물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사랑방 부동산에 게재된 광고를 살펴보면 제일풍경채(전세 400세대 규모)의 매매 물건은 40건이었던 반면, 전세는 단 1건이었다.

포스코다샵(전세 1140세대 규모) 또한 매매 물건은 53건이었지만, 전세는 8건에 불과했다. 금호

타운2차(전세 600세대 규모) 매매 물건 역시 45건에 달했지만 전세는 6건에 그쳤다.

줄어든 전세 물건은 매매로 이동했다. 7월 한 달간 이들 아파트의 전세 광고는 지난해 대비 75.3% 줄어 들었지만, 매매는 14.7% 상승했다.

이는 전세 메리트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 3년 사이 많게는 수억 원씩 올랐던 광주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보합세를 지속하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감소한 것도 전세 물건의 매매 전이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저금리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 매물 수 감소 추세가 이번 임대차 3법 개정 및 내년 신규 입주량 감소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이 예정돼있고 8년 전세임대아파트의 공급물량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당장 전세물량의 감소를 선부르게 예측하기보다는 매해 공급량과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유나 기자

한화건설 ‘포레나순천’ 분양

호남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 진·출입 '1분'



한화건설이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337-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 순천’을 분양한다.

포레나 순천이 들어서는 서면 일대는 대대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중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22만여㎡ 규모의 삼산공원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포레나 순천은 교통 여건이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았다.

단지와 인접해 있는 백강로를 통해서 삼산로와 순천IC로 접근이 용이하며,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여기에 약 1조 7000억원 사업비 규모의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교통망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춰졌다. NC백화점 순천점과 홈플러스 순천점, 순천문화예술회관,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순천의료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KTX 순천역, 순천종합버스터미널을 통해 서울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단지 양 옆으로 동천과 서천, 강청수변공원과 봉화산 등 천과 녹지가 자리잡은 주거환경 역시 장점이다. 인근으로 동산초, 순천제일고 등 학교가 위치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특히, 단지 내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포레나 순천은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단지 배치되며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구에서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중앙컴퓨터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원격점검 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누수감지시스템 등이 도입돼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 생긴다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 뒤 시행

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를 도입하고, 전매제한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 범위 내에서 거주 의무가 도입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 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 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

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